

데스크 시각

열고 보니 무늬만 ‘블랙 프라이데이’



최재호 경제부장

매년 11월 네 번째 금요일.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이 끝난 다음 날인 이날부터 쇼핑 상가에서는 평소보다 80~90%까지 할인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한다. 소비자들은 상가가 문을 열자마자 먼저 입장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한정수량으로 초특가가 나온 대형 TV를 차지하기 위해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는다. 해마다 해외토피코로 나오는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의 진풍경이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연말 쇼핑 시즌을 알리는 시점이자 연중 최대의 쇼핑이 이뤄지는 날이다. 이날을 기점으로 소비자의 소비 심리가 상승해 이전까지 지속된 장부상의 적자(red figure)가 흑자(black figure)로 전환된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다. 특히 이날부터 연말까지 이어지는 세일 기간에 미국 소비자의 각종

상품 구매가 집중되는데 미국 연간 소비의 20% 가량을 차지한다.

이처럼 외신보도에서나 접했던 블랙 프라이데이가 지난 1일부터 한국에서도 시작됐다. 하지만 사상 최대 세일행사라는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미국과 같은 쇼핑 전쟁은 찾아볼 수 없다. 이유는 정부 주도하에 일방통행 식으로 진행되는 할인 품목과 할인이 소비자들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이다.

할인율도 상품도 기대 이하

‘속사나’ 했더니 ‘역시나’다. 최대 70%까지 할인해 준다고 하지만 거의 다 이른바 ‘미끼 상품’이고, 실제 할인 폭은 10~30%에 불과해 일반적인 세일과 별 다를 게 없다. 그나마 최대 80%까지 깎아 주는 것은 아웃도어 용품 같은 이월 상품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고급 가전이나 명품 혹은 화장품 등은 빠져 있고, 편의점 ‘1+1 행사’를 제외하고는 평소와 다른 게 없다. 그러나 ‘속았다는 기분마저 든다’는 소비자들도 많다. ‘블랙 코미디데이’ ‘사상최대의 사기극’이라는 조롱 섞인 비난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백화점 소비가 전년 대비 늘었

다고 하지만 매년 명절 연휴가 끝난 직후 고객들의 소비가 급증하는 골든위크(Golden Week·황금쇼핑 주간)의 통상적인 할인 판매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일부 품목은 미처 팔지 못한 명절 선물의 ‘떨이’ 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통시장은 아예 행사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광주 무등시장과 목포 자유시장 등 광주·전남 전통시장 7곳이 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지만 지난달 30일에야 사업 선정이 이뤄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오는 8일 이후에야 참여가 가능하다고 한다. 사실 정부가 모델로 삼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영국의 ‘박싱데이’, 두바이 ‘쇼핑페스티벌’ 등은 길게는 수십 년 이상 된 사례들이다. 이만큼 같이 쓴다고 해서 똑 같은 효과를 거둘 수는 없다.

관치만으로는 성과 못 거둬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로 자리 잡은 데는 연말결산 직전 유통업체들이 팔고 남은 재고를 처분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재고 처리를 함으로써 보관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 그 물품을 소비자에게 파는 것이 유통업체로서는 훨씬 이득이 남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물건의 제조에서 판매까지의 라인이 복잡해서 미국처럼

80~90%의 할인을 할 수 없는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어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가 성공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미국은 상반기부터 상품기획 등 준비에 나서지만 우리는 불과 한 달을 남겨두고 행사가 급조됐다. 행사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그럼에도 정부 주도하에 일방통행 식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고, 결과적으로 졸속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것은 박수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시장의 자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관치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이번 행사도 시행 시기를 여유 있게 잡고 업계와 긴밀히 협의를 했다면 내수 진작 및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을 서울 등 대도시에만 끌어들이기 아니라 지방에도 군블이 지퍼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명실상부한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가 되는 것이다. 지방의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한다. 남은 기간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동참할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했으면 한다. / lion@kwangju.co.kr

은편칼럼

김영란법, 규제 위한 규제 되지 않아야



옥영석 2005년 수상자

지난 4일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추석절 업체별 매출 증가율이 편의점 52.3%, 온라인 14.2%, 아웃렛 13.8%, 농축산물전매장 11.4%,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각각 10.9%, 6.7%나 성장했다고 한다.

소비불황과 김영란법의 선제적 영향으로 인한 부진을 걱정하던 예상이 빗나가 다행스런 일이지만 내수가 살아나고 있다는 진단을 내리기에 시간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시장에서의 활력이 아직은 크게 느껴지지 않아서다.

가장 매출증가율이 높았던 편의점의 상품은 대부분 소포장에 도시락, 김밥, 달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이 직 무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유를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부패를 없애자는데 누군들 의의를 달 수 없었지만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규제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시행일이 1년 남짓 남아있지만 유통업체에는 이번 추석에도 법 적용여부를 묻는 전화가 걸려오곤 했다.

농진청의 자료에 의하면 평시에 대비하여 명절기간 중 한우는 471%, 배 886.8%, 전통주는 963.4% 소비가 증가하는 데 법 시행령의 선물한도액을 5만원으로 정하면 그동안 명절선물로 이용되던 농수축산물은 선물할 곳도 소비할 곳도 없는 애물단지라 될 수밖에 없다.

공무원이 지켜야할 행동기준을 규정한 「공무원행동강령」에는 축의금이 3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데도 규정을 지키는 공무원들이 몇이나 될지 의문스럽다. 그렇다면 현실을 반영해 김영란법 시행령의 선물한도액을 정하되, 그보다 선물가격이 높

다면 소속기관의 선물방송센터에 신고하거나 별도 대장을 작성하여 양로원이나 공익단체에 기부하게 하는 보완방법도 있을 것이다.

다소 번거로울 수도 있고 초기 이용률이 높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태백을 보내고 받을 때 선물가격대를 명시하거나 실물이 받는 이에게 도착하기 전 미리 고지하는 방안 등을 보완한다면 명절이나 기념일 등의 농수축산물 소비는 줄지 않게 하되 부정부패를 없애자는 명분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부정을 뿌리뽑자는 것이지만 농수축산업을 종사하는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어렵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 비단 농수축산업 종사자뿐 아니라 이제 겨우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내수와 경제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규제가 되지 않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할 때다. /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고

목포 내외항 재개발이 답이다



양원 목포대학교 산학협력 교수

목포를 중심으로 하는 전남 서남권은 지금 아사 직전의 상태에 있다. 그나마 지역경제를 근근이 떠받치고 있던 현대삼호를 위시한 지역의 조선소들이 세계적인 조선 산업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업의 침체는 대불공 단 내 선박 블록 공장들의 도산을 차례로 몰고 오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세계 조선업의 부활을 상당기간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세계 해운시장의 선박 공급 과잉 상태로 추가 수주가 어렵고, 세계 3대 조선국인 한국 중국 일본의 조선 설비가 과도하게 확충되어 있는 등 구조적인 어려움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목포항이 상업항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지역의 배후 산업단지의

이 좋은 지정학적 위치에 있으므로 상업항 및 어항의 기능 역시 포기해서는 안 된다.

목포항 기능 재배치 계획에 따라 현재 내항을 이용하고 있는 각종 어선들과 삼학도 주변의 외항부두에 접안 중인 해경 선박들은 북항으로 이전 계획에 있다. 목포시는 내항을 정비하여 마리나 항만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작금에도 소규모 마리나 시설이 부분적으로 완성되어 각종 레저용 선박들이 이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마리나 시설의 설치만으로 내항의 가치를 끌어내기에는 한참 부족하다. 더구나 내항은 레저용 선박들이 목포구와 달리도 외항에 나가는데 상당한 이격거리가 있어 마리나 시설로는 최고의 입지조건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목포항 내외항 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현재 항만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국내 항만은 부산 북항, 동해·북호항, 고현항과 광양 묘도 등 4곳이다. 이 중에서 목포 내외항 재개발사업은 부산 북항을 벤치마킹하면 될 듯하다. 항만재개발사업의 근거법은 항만법 제6장에 있다.〈해양수산부는 2016년 항만법에 시 항만재개발 부문을 분리해 내 단독법으로 제정할 예정으로 있다.〉 목포항 재개

발사업의 범위는 크루즈부두, 마리나 시설 등 내외항의 항만시설 정비와 함께 공동화가 되어버린 배후 원도심 지역을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해안로 정비를 통한 워터 프런트 확대, 바다 조망이 있는 숙박·휴양시설, 해양문화시설, 남도음식문화거리, 해산물 전통시장 등을 조성하고, 풍광이 뛰어난 인근 도서 지역을 연계시킬 수 있도록 공공지원시설을 갖춰야 한다. 무안공항과 KTX의 활용도를 높일 방법도 찾아야한다. 목포항과 여객선 터미널을 직접 연결하는 궤도전차를 도입하면 렌드 마크 역할을 훌륭히 해낼 것이다. 시드니의 달링하버, 샌프란시스코의 피셔맨스워프 등이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거듭난 것은 목포항이 지향해야 할 좋은 사례이다.

문제는 추진동력이다. 또 다른 주요 요소는 민간자본의 유치 여부이다. 목포시와 전남도가 중심이 되고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확보하고, 국내외 민간투자 자본을 끌어와야 한다. 목포 내외항 중심 항만 재개발사업의 성공은 향후 전남 서남권 경제가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유커’ 변방 광주·전남, 틈새시장을 노려라

메르스 사태 이후 뜸했던 ‘유커’(중국인 관광객)가 국경절 연휴(10월1일~7일)를 맞아 다시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유커들의 ‘변방’으로 전략해 버린 광주·전남의 경우, 바라다만 보는 처지여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올 8월까지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 377만 명 가운데 전남을 직접 방문한 비율은 0.75%(2만831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대동소이하다. 익히 알려진 대로 관광 인프라 부족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한국을 대표하는 서울이나 부산, 경관이 뛰어난 제주에 비하면 근본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광주·전남은 다양한 유커 유치 방안을 마련해 왔다. 전남도의 경우 2018년 중국인 관광객을 33만 명으로 늘리기 위해 계층·연령별 타겟 3대 중점 과제 18개 사업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높다. 우선 계획을 실행하는데 드는 막대한 예산 조달이 어렵고 개발에 따른 민원 등이 가로막고 있다. 무안공항과 중국을 연결하는 전세기 취항 확대, 저비용 항공사 유치, 지역 면세점 설치, 관광숙박시설 투자 확충 등도 난제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어서만은 안 될 일이다. 최근 중국 관광객 변화 추이의 틈새를 노려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즉, 아직까지 집단방문형이 유커의 대세이지만 서서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신만의 취향을 찾아 떠나는 ‘테마형’으로 옮겨 가는 점을 고려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관광자원을 꾸준히 확보하면서 경쟁 우위인 지역 관광상품 개발에 주력하라고 조언한다. 광주와 전남만의 특색 있는 아이디어와 즐길 거리를 찾는다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 여건은 어렵더라도 해법 찾기에 전념해야 유커 특수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건 생기면 파출소 문 닫고 출동한다니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지구대와 파출소의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사건·사고가 생기면 아예 파출소의 문을 잠그고 출동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세정지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에 따르면 전남 지방경찰청 소속 지구대·파출소 203개소 중 70.9%인 144개소가 문을 닫고 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전국 평균 35.5%의 2배에 달한다.

이 같은 실정은 순전히 경찰 인력 부족 때문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남청의 총 정원은 2392명. 이 가운데 현인원이 2262명으로 63명이 부족한 형편이다. 특히 전남의 지구대와 파출소의 경우 203곳 가운데 90곳에서 정원이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제 전 남청 인원 부족 63명보다 지구대나 파출소의 인원이 최소 27명 더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경찰청이나 경찰서의 행정인력 채용에 밀려 민생 안전

의 최일선인 지구대와 파출소의 인력 충원이 뒷걸음질치고 있음은 보여 준다.

경찰 인력 부족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찰의 공조 수사 부실로 인한 피해다. 광주 서구에서는 살인범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50대 여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40여분 만에 발견돼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을 뻔 했다. 남구에서는 40대 여성 사립서 거액을 훔친 절도범을 붙잡고도 피해범이나 수범에 대한 공조가 이뤄지지 않아 다른 사건에 묻혀 버린 피해도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구대와 파출소는 범죄 대응과 민원 처리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 경우 203곳 가운데 90곳에서 정원이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제 전 남청 인원 부족 63명보다 지구대나 파출소의 인원이 최소 27명 더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경찰청이나 경찰서의 행정인력 채용에 밀려 민생 안전

無等鼓

정조는 재위 24년간(1776~1800년) 모두 41번의 과거 시험을 열었다. 조선 시대 과거 시험은 한양에서 치르는 것이 상례지만 인재 발굴을 위해 특정 지역 유생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시험(별시)을 열기도 했다. 정조는 41번 중 여섯 차례의 특별시험을 치렀는데 그중 하나가 1798년 4월의 광주 별시다.

광주목 객사인 ‘광산관’(옛 부동극장터) 앞뜰에서 열린 광주 별시에는 69명이 응시해 3일간 경합을 벌였다. 이들은 1년 전 어정책자 교정

1798년 광주 과거시험

1798년 광주 과거시험 국의 조정이 결국 왕조의 개창으로 이어진 것에 탄복할 따름이다”라고 적었다. 고전의 의미를 따지는 의(義)에선 ‘내가 고대의 거처를 살펴봤더니 납작 지방만 한 곳이 없었다는 시경 구절이 실리게 된 시대적 배경과 그것에 담긴 의미를 물었다. 고정봉은 주나라 선왕이 납작밖에 경영할 곳이 없다는 의미에서 했던 말로 모든 나라의 납복은 인제가 풍부한 지역이라며 넌지시 임금에게 호남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호남의 일곱 가지 폐단에 대한 해결책을 묻는 책(策) 문제에는 출신에 구애받지 않는 인재 등용을 제시했다. 광주 별시 장원으로 문과 최종 시험인 전시 응시 자격을 얻은 고정봉은 2년 뒤 정조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생일에 맞춰 치른 시험에서 ‘어고방목’이라는 28m 길이의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장원은 고경명 장군의 후손인 고정봉이 차지했다.

부(賦)는 시와 산문의 중간 형식으로 수사적인 기교를 발휘해 문장력을 표현하는 시험이다. 이날 문제는 이성계가 고조부로 낯날 목조로 추존된 이안사가 어릴 적 병정놀이를 했다는 나무인 ‘장군수’였다. 고정봉은 “장군수에서 보인 건 /장필수 사회부장 bungy@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